

‘중복민원’ 행정력 낭비 막는다

서울시, 전담 대응팀 구성·가동
종결·반복·비정상 민원 등 담당
행정 6급, 임기제 등 총 4명 근무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 민원 전담 대응팀’을 꾸려 가동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내 반복 민원 전담대응팀과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시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또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된 사안에 대해 다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반복민원 전담 대응 인력은 행정 6급 1명, 임기제 3명으로 총 4명이다. 대응팀은 ▲반복민원 심의회 안전 상정 운영 등 사무처리 지원 ▲종결 처리된 민

원의 적정성 재검토 ▲중복민원 중재·조정 ▲비정상적인 민원행태(폭언·협박·장시간 통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민원인 방문·면담·전화·간담회를 통한 민원해결 ▲반복민원 발생원인, 해결방안,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연구 및 사례관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서울시에 접수된 중복민원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신림선 경전철 공사를 중단해 소음 피해를 줄여달라는 요청과 4륜 SUV 등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요구였다.

신림선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시는 “신림선 108S 환기구 주변은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 이하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관리토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지난 3월 20일~4월 9일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 4륜 SUV 등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운전자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는 다음달 인재개발원에 의뢰해 갈등·심리 소통전문가인 일반임기제(6급) 3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아울러시는 국장급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3명, 외부전문가 2명으로 반복민원 심의회를 만들어 시민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심의 대상은 민원조정 위원회 심의 결과 시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다시 같은 요구가 접수됐거나 상습적이고 주기적인 협박 및 시위의 원인이 되는 민원 처리·상담에 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다. 시 본청, 자치구에서 대응을 요청하면 서울시 반복민원 심의회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심의여부를 판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반복민원 심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반복민원 심의 대상과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반복민원 심의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학원가, 코로나19 방역 총력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정고등학교 학생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목동 학원가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1일 오후 목동 한 학원에서 양천구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저소득층·신혼부부에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 전세금 지원형 총 2800호

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2500호를, 신혼부부에게 300호를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지원 신청을 하면 공사가 가부를 검토한 뒤 가능할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또는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박원순 시장. /손진영 기자

저소득층은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과 보증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10~19일 주민등록이 된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지하철역사 유휴공간에 ‘생활물류센터’

서울교통공사

2022년까지 3단계 거쳐 100곳 설치
택배·짐·개인 이동수단 등 보관하고
폰 배터리 충전, 우산 대여 서비스도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역사 100여곳에 ‘생활물류센터’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생활물류센터에 택배·짐·물품·개인이동수단을 맡길 수 있으며,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우산을 빌리고 돌려줄 수도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기반 생활물류체계 구축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생활물류 지원센터는 역사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에 들어선다. 유·무인 택배물품 보관·접수·픽업, 개인물품 보관, 개인이동수단 관리, 스마트폰 배터리와 우산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사는 1단계로 올해 지원센터 20곳을 설치해 물품보관 위주의 단일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50곳에서 택배 접수, 배송·세탁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지

서울 지하철 ‘생활물류센터’ 개요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 최대 100여곳 설치

물품보관전달함	보관·픽업	기타 편의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물품 보관 택배 보관·전달 유실물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객 캐리어 보관·배송 개인물품 장기보관 지역 소상공인 재고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페테리아 등 휴게공간 휴대폰 충전 우산 대여 등

자료/ 서울교통공사

원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에는 3단계로 지원센터를 100개소로 늘리고 신선물류와 편의점 등 유통 서비스로 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현재 공사는 지하철 물류수송 체계의 핵심인 차량기지 안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이다.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차량기지 내 택배분류시설 개발이 허용됐다.

공사가 작년에 진행한 ‘도시철도 공동물류플랫폼 실용화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물류수송량의 5%가 도로에서 도시철도로 전환

될 경우 10년간 약 2751억원의 편익과 608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화물전용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며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사회변화에 맞춰 생활물류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복합부가가치를 창출해 공기업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도시문제 해결 혁신기술개발 기업 모집

서울시, 비용·실험공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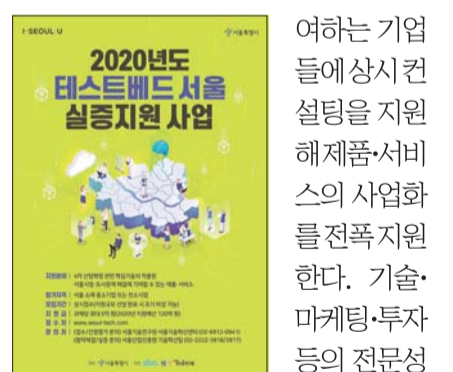
서울시는 도시 문제 해결과 공공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혁신기술을 개발할 기업을 모집해 비용과 실험공간(테스트베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20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으로 시정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 20건을 개발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건축설계안 3차원 시뮬레이션 및 법규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한 VR(가상현실) 기술 ▲현장중심 산불재난 관리를 위한 드론 기술 ▲상수도 송수 펌프 운전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등을 구현할 기업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은 기업 측에서 자사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서울시의 담당 부서와 관련 현장을 스스로 조사해 제안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수요 기관이 필요한 혁신 기술을 공개하고 기업이 지원하는 방식을 추가해 기술 적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시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참



여하는 기업들에 상시 컨설팅을 지원해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전폭 지원한다. 기술·마케팅·투자 등의 전문성을 지닌 200

명 내외의 ‘혁신기술 지원단’이 분야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테스트베드 서울’은 지하철, 도로, 학교 등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서 가장 1년간 테스트할 기회와 최대 5억원의 실증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증 후에는 결과를 평가하고 ‘실증 확인서’를 발급해 기업에서 국내·외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2년간 시는 총 39개의 혁신기술을 선정해 시정 현장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155억원을 지원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서울’에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올해부터 기업 부담을 낮추도록 사업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태양광 보급 추진

에너지공과 ‘그린뉴딜생태계’ 협약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그린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신축 공공건물 등 제로에너지건물 도입·확산 ▲에너지 다소비 건물 관리 강화 ▲기존 건물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서울시 태양광 실증단지 운영 참여 ▲태양광 보급

확산 ▲에너지 신산업 지원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이다.

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와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태양광 확대 보급 등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이를 소규모 건물과 민간건

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시는 ‘서울형 그린뉴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책, 민간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연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그린뉴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